http://www.cerik.re.kr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88호
2018. 12. 17

정책동향

-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의 제도 완비와 쾌윈
- 내년도 SOC 예산, 19.8조원으로 '찔끔' 늘어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정착 과제

시장동향

- 10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

산업정보

- 2018년 3/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건설논단

- 직시(直視)와 직면(直面)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의 제도 완비와 퀵윈[1]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표 임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2]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기능 발휘에 한계가 드러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관리(생애주기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미국 등 선진 국가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음.
  - 따라서,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시설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함.

- 전략적 투자와 관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공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완비하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됨.
  - 센서, 로봇 검사, AI 등의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을 접목할 경우, 인프라 건설·운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걸쳐 이를 확정함.
  - 대상 시설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3]로 정의함.
  - '기반시설 실태조사'는 △기반시설의 건설·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최소 유지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성능평가 시행 계획 또는 그 결과, △성능개선 기준과의 충족 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1) 단기간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 과제를 말함.
2) 이 법안은 2017년 11월 15일에 발의되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걸쳐, 2018년 12월 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3)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 · 공원 · 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 공급시설,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및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 문화체육시설,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 포함됨.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함.

-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투자의 시급성을 심의·확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시설물 관리 주체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함.

-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 성능개선 공통기준 등을 심의함.
  -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필요 예산의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용 한도를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진단, 보수·보강, 성능개선 비용 등을 출자·출연·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사용료를 부과하는 관리 주체는 기반시설 사용자에게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사용료의 1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함.

- 시설물 관리 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음.
  -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① 기반시설 관리·운영 수입금, ②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으로 함.
  - 관리 주체는 국가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있음.

퀵윈(Quick-win) 과제

- '기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시설별 하위법(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항만법」, 「도시철도법」 등)의 개선이 시급함.
  - 정부의 '생활 SOC' 예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개량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노후 인프라의 조사·진단과 보수·보강·개량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함.

이영환(연구본부장 · yhlee@cerik.re.kr)

내년도 SOC 예산, 19.8조원으로 '찔끔' 늘어

- 올해보다 0.8조원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의 4.2%에 불과해 -

내년도 SOC 예산, 정부안보다 증액되었으나 전체의 4.2%에 불과

-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40조 7,000억원(9.5%) 증가한 469조 6,000억원으로 최종 편성됨.
  - 12대 주요 분야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노동이 16조 4,000억원 늘어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보건·복지·노동 및 일반·지방행정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으나, 최종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됨.
  -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에 불과함.

<표 1> 분야별 2019년 최종 예산안

(단위 : 조원, %)

구분	2018년(A)	2019년		증감		증감률	비중
		정부안(B)	최종(C)	(B-A)	(C-A)		
◆ 총지출	428.8	470.5	469.6	41.7	40.7	9.5	100.0
1. 보건·복지·노동	144.6	162.2	161.0	17.6	16.4	11.3	34.3
2. 교육	64.2	70.9	70.6	6.7	6.5	10.1	15.0
3. 문화·체육·관광	6.5	7.1	7.2	0.6	0.8	12.2	1.5
4. 환경	6.9	7.1	7.4	0.2	0.5	7.2	1.6
5. R&D	19.7	20.4	20.5	0.7	0.9	4.4	4.4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6	18.8	2.3	2.5	15.1	4.0
7. SOC	19.0	18.5	19.8	-0.5	0.8	4.0	4.2
8. 농림·수산·식품	19.7	19.9	20.0	0.2	0.3	1.5	4.3
9. 국방	43.2	46.7	46.7	3.5	3.5	8.2	9.9
10. 외교·통일	4.7	5.1	5.1	0.4	0.3	7.2	1.1
11. 공공질서·안전	19.1	20.0	20.1	0.9	1.1	5.5	4.3
12. 일반·지방행정	69.0	77.9	76.6	8.9	7.5	10.9	16.3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12.8).

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조 2,000억원 증액

- SOC 예산 정부안은 도로와 철도 및 도시철도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429억원이 감소될 예정이었으나, 최종안은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조 2,000억원이 확대되면서 증액됨.
  - 안성~구리 고속도로, 도담~영천 복선전철 등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은 내년도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이 반영됨.

<표 2> 2019년 SOC 예산 주요 증액 사업

(단위 :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정부안	최종
안성~구리 고속도로	2,430	2,659	3,259
도담~영천 복선전철	3,360	3,391	4,391
서해선 복선전철	5,883	5,985	6,985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2,887	2,900	3,900
신안산선 복선전철	100	800	850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서울·부산)	570	-	414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12.8).

SOC 예산 감소의 중·장기 기조는 여전

- 인프라 투자는 다른 분야보다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며, 소득 불평등 완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 등을 가져옴.[4)]
  - 국회예산정책처(2014)에 따르면, SOC 분야에 추가적으로 1조원 지출시 실질 GDP 성장이 0.076%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타 부문의 효과와 비교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정 산업의 고용 증가가 수요를 증대시켜 전 산업의 고용 증가를 유발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고용승수' 또한 SOC 분야가 가장 큼.

- 미국에서 2016년과 2018년에 발간된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5)]는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 정권 모두에게 인프라 투자 정책의 효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체 예산 가운데 SOC 예산 비중이 4.2%에 불과함. SOC 예산 감소의 중·장기 기조는 여전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엄근용(부연구위원 · kyeom@cerik.re.kr)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8.11), 「성장, 분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 pp.19-26.
5)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매년 2월경에 'Council of Economic Advisers(CEA)'가 발행하며,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주요 경제 이슈 및 이에 대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CEA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대내·외 경제정책 자문기구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정착 과제

–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과 민간 공사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기 연장 가능 여부[6)]

-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0%)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기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임.
  - 건설업은 선판매·후생산 구조를 가진 수주 산업으로, 기 수주된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증가는 계약 변경을 통해서만 반영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공공공사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 변경의 기본 원칙만을 마련하였을 뿐, 세부 지침이나 국내 건설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설사업에 대한 지침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공기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48개 사업 중 22개소(45.8%)가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조사됨.
  - 사업 유형별로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곳은 토목사업 34개 중 11개(32.4%), 건축사업 14개 중 11개(78.6%)로, 특히 민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사업(14개 중 12개 사업이 민간사업)에서 계약 변경 이슈가 클 것으로 나타남.
  - 아파트사업의 경우 7개 공기 부족 예상 사업 중 6개 사업과 오피스텔 3개 사업 모두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됨.

탄력근로제 적용 여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함.
  -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부터 있어 왔으며, 지난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임.

6)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8),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영향 분석」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건설동향브리핑』 제687~688호에 걸쳐 게재되는 연속 기사임.

-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48개 사업 중 35개)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은 취업 규칙 2주, 노사 합의 3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사 합의 3개월은 근로자와 합의한 시점에서 계획한 3개월 단위의 근로자 업무가 변경될 경우, 계획 변경 후 재합의가 필요함.
  -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3개월 단위의 근로자 업무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탄력근로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 기 계약된 공공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장된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이나 돌관 작업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함. 지침 마련 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지침 마련이 지연될 경우 일부 사업은 현장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품질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는 결국 공공 건설사업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조속히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피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민간 발주자와 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 계약된 민간사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가 필요함.
  - 기 계약된 민간사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증가 및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 보전 방안은 전무한 상황임.
  - 민간 건설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공사,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사는 입주 시기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신규 사업은 공공과 민간 사업을 막론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려한 공기 및 공사비 산정이 필요함.
  -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조사된 109개 건설사업 중 12개소(10.1%)만이 주 52시간 이하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었음. 이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계약되는 건설사업은 현장을 주 52시간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산정되어야 함.

- 기상 요인으로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건설현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최수영(부연구위원 · sooyoung.choe@cerik.re.kr)

10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

- 공공부문 기저효과로 증가, 1~10월 누적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 -

2018년 10월 건설 수주,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

-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0월 국내 건설 수주는 예년보다 저조한 9조 2,980억원을 기록했지만(2013~2017년 10월 수주 평균 9조 8,000억원), 2017년 10월 수주가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해 3개월 만에 반등함(<표 1> 참조).

공공부문은 기저효과로 88.4% 증가, 민간부문은 주택 수주가 양호해 3.3% 증가

- 공공부문 수주는 2017년 10월 수주가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4% 증가한 1조 7,056억원을 기록함.
  - 토목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92.8% 증가해 9,113억원을 기록함.
  - 주택 수주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448.7% 급등한 5,346억원을 기록함.
  - 비주택 건축 수주는 22.5% 감소한 2,597억원을 기록함으로써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민간부문 수주의 경우, 주택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7조 5,924억원을 기록함.
  - 토목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2.4% 감소한 7,712억원을 기록함.
  - 주택 수주는 지방 재개발 수주 증가의 영향으로 41.1% 증가한 3조 7,641억원을 기록함.
  - 비주택 건축 수주는 13.7% 감소한 3조 571억원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표 1> 2018년 10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7. 10월	8,258.3	905.2	472.6	432.6	97.4	335.1	7,353.0	1,141.0	6,212.0	2,668.6	3,543.4
2018. 10월	9,298.0	1,705.6	911.3	794.3	534.6	259.7	7,592.4	771.2	6,821.2	3,764.1	3,057.1
증감률	12.6	88.4	92.8	83.6	448.7	-22.5	3.3	-32.4	9.8	41.1	-13.7

주 :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 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세부적으로 건축은 주택과 관공서, 토목은 도로·철도·항만 및 공항 등이 수주 양호

- 10월 건축 수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55.4% 증가했고, 관공서 수주도 140.5% 증가하였음(<표 2> 참조).

- 토목은 도로 및 교량과 철도 및 궤도 수주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29.2%, 15.3% 증가했음. 항만 및 공항과 상하수도 수주도 각각 442.7%, 56.0% 늘어 양호한 수준을 보임.

<표 2> 2018년 10월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상하수도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
2018. 10월	4,298.7	1,553.7	992.6	643.6	126.9	260.9	20.5	170.7	85.9	128.8	645.3
증감률	55.4	-30.1	-20.2	140.5	-11.2	229.2	15.3	442.7	56.0	-51.8	-14.7

자료 : 통계청.

1~10월 건설 수주,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103.4조원 기록

- 올해 1~10월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103조 4,000억원을 기록함(<표 3> 참조).
  - 10월 누적 실적으로는 지난 4년래 가장 부진함.

- 공공부문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하고, 민간부문 수주 또한 2.5% 감소함.
  - 공공부문 수주의 경우, 토목과 비주택 건축 수주의 침체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함.
  - 민간부문은 토목 수주는 양호하지만 주택 수주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함.

- 결국, 2018년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며, 2015년 이후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문에서 10% 이상 감소하고, 민간부문도 주택 수주의 부진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큼.

<표 3> 2018년 1~10월 누적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주택	비주택
2017. 1~10월	109,164.4	22,723.7	14,107.6	8,616.2	4,636.4	3,979.7	86,440.7	12,289.6	74,151.1	45,594.7	28,556.3
2018. 1~10월	103,359.9	19,116.6	12,178.9	6,937.8	4,459.9	2,477.9	84,243.3	18,142.6	66,100.7	37,932.5	28,168.2
증감률	-5.3	-15.9	-13.7	-19.5	-3.8	-37.7	-2.5	47.6	-10.9	-16.8	-1.4

주 :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 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 자료 : 통계청.

박철한(부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2018년 3/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 모두 하락, 안정성 지표는 양호 –

성장성 지표 중 특히 매출액증가율 큰 폭으로 하락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건설업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은 모두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음. 특히 매출액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으로 돌아서며 큰 폭의 낙차를 보임(<표 1> 참조).
  - 2018년 3/4분기 총자산증가율은 0.21%로, 2017년 3/4분기(0.22%)에 비해서는 0.01%p, 2018년 2/4분기(2.28%)에 비해서는 2.07%p 하락함.
  - 2018년 3/4분기 매출액증가율은 -6.28%까지 큰 폭으로 하락함. 이는 2017년 3/4분기(10.80%)에 비해서는 17.08%p, 2018년 2/4분기(8.02%)에 비해서는 14.30%p만큼 하락한 수치임.
-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건설업 경영 지표 악화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우려됨.

수익성 지표 역시 대체로 하락

- 2018년 3/4분기 건설업 수익성 지표 중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함.
  - 2018년 3/4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51%로, 2017년 3/4분기(7.72%)에 비해 다소 하락함.
  - 2018년 3/4분기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100]은 870.93%로, 2017년 3/4분기(894.89%)에 비해 23.96%p 하락함.
  - 반면,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2017년 3/4분기 3.75%에서 2018년 3/4분기 5.38%로 1.63%p 상승함.
- 2018년 2/4분기와 비교했을 때 2018년 3/4분기 건설업 수익성 지표는 모두 하락함.
  - 2018년 2/4분기와 3/4분기의 수익성 지표를 비교하면,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9.34%에서 5.38%로 3.96%p, 매출액영업이익률은 9.03%에서 7.51%로 1.52%p, 이자보상비율은 1,231.78%에서 870.93%로 360.85%p가 각각 하락함.
- 2018년 3/4분기 전(全) 산업의 수익성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으나 건설업 수익성 지표는 하락하며 대조를 이룸.
  - 2017년 3/4분기와 2018년 3/4분기 전 산업의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보면,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6.44%에서 7.15%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37%에서 7.62%로, 이자보상비율은 789.81%에서 813.96%로 각각 상승함.

-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향후 수익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난 11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함에 따라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함. 향후 건설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나, 전분기 대비 다소 하락함.
  - 2018년 3/4분기 건설업 총자산회전율은 0.97%로 2017년 3/4분기(0.95%)에 비해 0.02%p 상승함으로써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8년 2/4분기(1.14%)와 비교하면 0.17%p 하락함.

부채비율은 양호한 수치를 보였으나 차입금의존도는 다소 상승

- 건설업 안정성 지표 중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은 2018년 2/4분기와 비슷하거나 다소 개선된 수치를 보임.
  - 2018년 3/4분기 자기자본비율은 43.33%로 2018년 2/4분기(42.74%)에 비해 0.59%p 상승함.
  - 건설업 부채비율은 2018년 2/4분기 134.00%에서 2018년 3/4분기 130.80%로 3.20%p 하락함.

- 차입금의존도는 2018년 2/4분기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임.
  - 2018년 3/4분기 차입금의존도[(차입금+회사채)/총자산×100]는 18.78%로서 2018년 2/4분기(18.72%)보다 0.06%p 상승함.

<표 1> 주요 경영 지표

(단위 : %)

구분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안정성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 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건설업	2017 3/4	0.22	10.80	3.75	7.72	894.89	0.95	42.52	135.16	19.43
	2018 2/4	2.28	8.02	9.34	9.03	1,231.78	1.14	42.74	134.00	18.72
	2018 3/4	0.21	-6.28	5.38	7.51	870.93	0.97	43.33	130.80	18.78
제조업	2018 3/4	2.71	6.24	9.06	9.74	1,235.39	0.89	59.82	67.18	18.31
전 산업	2018 3/4	2.00	3.52	7.15	7.62	813.96	0.87	54.65	82.98	20.28

자료 : 한국은행.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건설논단

직시(直視)와 직면(直面)

영화의 한 장면이 있다. 들판 위 누이의 뒤에서 주인공이 숨은 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이다. 거센 바람 때문에 화살이 잘못 날아가 누이를 죽일 수도 있다. 이때 주인공은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는 바람은 극복의 대상일 뿐이며 실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직시하는 순간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 정도가 되겠다.

이 영화 대사와 어울리는 장면을 가진 산업이 있다. 바로 해외건설산업이다. 우리 기업들이 직시해야 할 두려움은 커지고만 있으며, 직면해야 할 바람은 거세기만 하다.

해외건설 수주는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2016년(282억 달러)과 2017년(290억 달러)에 이어 올해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기형적인 수주 구조, 국제 유가 하락, 저가 수주 등 부진의 원인은 많다. 그런데 최근의 부진이 유독 우리나라 건설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글로벌 건설 전문지 ENR에 따르면 250대 해외 건설기업의 2017년 매출 실적이 2014년 이후 3년 만에 전년 대비 3.1% 증가해 반등세로 전환했다. 공종별로는 석유화학을 제외한 교통·건축 등 모든 부문이 전년 대비 최대 14.5%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해외 매출의 반등 속에서도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주력 시장인 중동과 주력 상품인 석유부문은 부진했다. 특히 중동 시장의 매출은 국제 유가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1% 감소해 814억 달러에 그쳤다. 2016년 1,045억 달러를 기록한 석유화학부문의 해외 매출은 17.3% 감소한 891억 달러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일부 지역과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는 글로벌 시장의 회복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기업의 장점이 발휘되는 시장과 상품이 아닌 다른 영역의 성장은 우리와 무관한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며 우리 기업이 직면한 위기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는 외면하면 편하고, 대면하면 불편하다. 그런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직시가 필요하고, 직면 없이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이 저력이 있다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그 저력이라는 것도 올바른 상황 인식과 대응력 없이는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서울경제, 2018. 11. 25〉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